

민법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증명 없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 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취득자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 ④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⑤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2.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인 것은?

- ① 상계권 ② 계약해제권 ③ 채권자취소권
- ④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3.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자연인은 출생신고 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② 반려동물은 위자료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④ 태아는 부(父)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⑤ 인정사망 후에는 반대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4.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④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 ⑤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5.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보존행위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③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결정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 ⑤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6.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있다.
- ④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 결정되고,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특정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

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면 종물이다.
- ② 주물·종물에 관한 민법상 법리는 물건 상호간에만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유추적용 되지 않는다.
- ③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는 없다.
- ④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 ⑤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8.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항변권에 해당한다.
- ③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 ④ 부양청구권은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
-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 ② 사단법인은 정관이 작성된 때로부터 성립한다.
- ③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④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10.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1.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A의 총유물에 관한 채무에 대해 甲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甲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乙에게 위임하여 乙이 A를 대표하여 대행행위를 한 경우, 그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치지 않는다.
- ㄷ. 甲의 직무수행상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丙에 대하여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되어 A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었다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2.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 ② 정관에서 정한 변경방법을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 ③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⑤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13.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법률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illegible]

1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법정추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5.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②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한 경우, 증여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유효하다.
-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6. 甲은 자신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X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丙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ㄴ. 甲과 丙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ㄷ. 丙 명의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丁이 X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②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③ 어떤 해약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 ④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의사결정의 불법적인 간섭이 아니다.
- ⑤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②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 ③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 ④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양수인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19. 甲은 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에게는 대리권이 없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 체결 당시 甲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악의인 丙은 乙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인을 최고할 수 없다.
- ② 甲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乙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은 효력이 있다.
- ③ 계약 체결 당시 甲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악의인 丙은 甲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丙이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때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에 대하여 丙이 악의라는 사실은 乙이 증명해야 한다.
- ⑤ 乙이 甲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丙이 그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乙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2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그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④ 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 등기도 유효하다.
- 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 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 무효이다.

2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 ②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 또는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③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⑤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2.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③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된다.
- ④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⑤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23.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② 정지조건부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불이행한 때부터 진행된다.
- ④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⑤ 확정기한부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후 당사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24.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 ② 매월 지급하는 아파트 관리비채권
- ③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3개월 분의 지연손해금채권
- ④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채권
- ⑤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2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 ③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저장권자는 저장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26.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丙과 X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등기 의무는 소멸한다.
- ㄴ.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乙이 甲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그 등기청구권의 양도 통지만으로도 丙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7.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 ②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 ③ 취득시효 목적물이 가압류되면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이 된 경우,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② 기존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 ③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매수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 ④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임차권자의 승낙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⑤ 석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으로 제한된다.

2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②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③ 동일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 ④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 ⑤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3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②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점유에 해당한다.
-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④ 유치권 배제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 ⑤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④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 ⑤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3. 甲은 그 소유의 특정물 X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甲에게 X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에게 X 대신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인도하고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③ X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 甲이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도 乙의 X에 관한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 甲의 채권자 丙이 X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사유만으로는 甲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다.
- ⑤ X를 보관하던 甲의 친구 丁이 X를 귀책사유 없이 잃어버린 경우, 乙은 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4.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영수증 소지자에게 변제 수령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②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은 소멸한다.
- ③ 이행인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자는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5.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채권자는 시효완성 전의 그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경우, 일방당사자가 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매수인이 부수적 약정을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6. 甲은 乙과 乙의 X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면서, 甲만이 예약완결권을 가지고 이를 계약체결일부터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의 예약은 편무예약이다.
- ② 甲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
- ③ 甲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려면 乙에게 1억 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甲이 X를 이미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약정한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 甲의 예약완결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7. 甲은 그 소유의 X창고를 乙에게 임대해 주었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X를 전대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② 乙의 차임연체로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이 이를 丙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乙과 丙의 전대차가 종료된 경우, 丙은 甲의 동의를 얻어 乙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丙은 X를 甲에게 직접 인도하면 乙에 대한 인도 의무를 면한다.
- ⑤ 丙이 甲에게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甲과 乙의 임대차상의 의무와 乙과 丙의 전대차상의 의무 중 작은 것을 한도로 한다.

38.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수급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도급인은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한다.
- ④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⑤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더라도 수급인은 그 사유를 이유로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39.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 토지의 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⑤ 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40. 甲은 집 근처 골목에서 乙, 丙, 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때, 乙은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고, 丙과 丁이 주도적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은 乙에게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乙이 12세의 미성년자인 경우, 乙의 학교선생님은 법정감독의무자로서 감독자책임을 진다.
- ㄷ. 丁이 甲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 시부터 乙과 丙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